

2007년 외교정책 추진 방향

박 인 국*

2005년을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 원년’으로 정하고 이후 변화와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2006년 5대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25개 이행 과제, 그리고 5개 혁신과제를 설정한 데 이어 2007년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 증진 및 국제평화예의 기여,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통상 경쟁력 강화, 재외국민·동포의 안전과 권익 증진, 국가 이미지 및 외교정책에 대한 대내외 이해 제고 등 6가지 전략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올해 정부의 외교정책 추진 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I.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 증진 및 국제평화예의 기여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

북핵 문제는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및 우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라는 3대 기본원칙에 따라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강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의 신속한 채택·이행에 동참하는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핵불용의 기본입장을 확고히 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및 북한의 핵포기를 이루어 나간다는 관련국들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서 작년 12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된 바, 동 회의는 협상의 모멘텀을 복원시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논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차기 회담에서의 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특히, 동 회담에서 미측은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 및 9·19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정부는 북한이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거쳐 긍정적으로 응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관련국들과의 협력하에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한편, 지난 번 회의시 미·북간 BDA 문제에 대한 별도 대화가 병행 개최되었으며, 정부로서는 북핵문제와 BDA 관련 문제는 별개라는 기본입장하에 미·북간 협의를 통해 동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 화해·협력에 바탕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 등의 여파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등 민간주도의 경협사업 및 각종 사회문화 교류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번영 및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

해와 지지를 심화·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북한 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이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국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HR) 등 관련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하면서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동북아 평화 구축 기반 조성

노무현 대통령께서 작년 9월 핀란드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에서 강조하셨듯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역내 다자안보협력 필요성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도 주요 이행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3대 원칙, 즉 포괄적 안보, 협력 안보 및 인간 안보를 기초로 하면서, 특히 동북아 국가간 대립과 논란의 소지가 작고 지역자원의 공동 대처가 필요한 환경, 에너지, 조류독감, 재난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협력대화」(NEACD),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기존 다자안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기존 우방국 및 유사입장 국가들 (like-minded countries)과의 정책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4.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우리나라는 1991년 UN 가입 이래 UN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전개하여 왔으며, 제8대 UN 사무총장 진출은 그간 쌓아 온 우리의 다자외교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룩한 쾌거라고 하겠다. 정부는 금번 UN 사무총장 진출을 계기로 UN의 주요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다자무대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과 발언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UN 개혁 문제가 2007년에도 UN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선진국 국가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제네바그룹」, 「JUSCANZ 그룹」 등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UN 개혁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UN 분담률 산정 방식이 개정된 2000년 이래로 체납되어 온 1.1억불 수준의 국제기구분담금 체납금을 금년중 일괄 납부함으로써 세계 경제규모 11위에 상응하는 UN 내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며, 금년에도 주요 기구 이사국 수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특히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5.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의 기여

인권·민주주의 등 인류보편적 가치 증진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 추세에 부응하고 테러·마약·난민·전염병·초국가적 범죄 등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냉전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분쟁과 내전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UN의 평화유지활동(PKO)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특히 우리군의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부는 우리군의 안전, 파병지역과의 양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UN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350명 규모의 병력을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할 예정이며, 국내적으로는 평화유지군 파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제를 갖추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축·비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9·11 테러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른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CTBT) 조기 발효 및 「핵분열물질생산금지협약」(FMCT) 협상 개시와 화학무기류 및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 이전에 관한 다자 수출통제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NPT 체제의 장래를 결정할 시금석이 될 2010년 제8차 NPT 평가 회의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인 2007년 NPT 평가 1차 준비회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

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금년 군축·비확산 분야의 최대 과제인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테러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에도 정부는 UN, ARF, APEC, ASEM 등을 통해 대테러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APEC 대테러대책반」(CTTF) 의장국 수임과 주요 우방국과의 대테러 대책 협의채널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테러 및 초국가범죄 대처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6. 인권 보호·증진 및 민주주의 확산 기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이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개발과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3대 주요 축(pillar)이라는 인식하에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상호 연관성 등 확립된 인권 관련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성실히 이행·준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범세계적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작년에 창설된 「UN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人權高等副辦務官(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배출한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의 제도적 정착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 실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작년 제61차 UN총회시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그간의 ‘기권’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우리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국제사회간 대화와 협력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한편, 아시아내 모범적 인권보호국이자 성숙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신생·회복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도 계속 동참하고자 하며, 특히 「민주주의 공동체」(CD) 공동주도국으로서 CD의 제도화 등 제반 논의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

7. 지역협력체 활동 주도적 참여

전 세계적으로 EU, NAFTA 등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및 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시아의 경우 ASEAN을 제외하고는 통합의 진척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어 우리 외교의 다원화와 영역 확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ASEAN + 3」를 중심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간의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을 주도해 나가면서 금년 6월 아시아 및 중동의 30개국 참석하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역내 공동협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APEC 부산 로드맵의 주요 분야별 이행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아시아와 유럽간의 유일한 협력 프로세스인 ASEM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對유라시아 외교의 지평을 넓히면서 아시아-유럽간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8. 국제법 형성과정 기여 및 외교활동 법적 기반 강화

국제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재판관을 배출한 데 이어 우리나라 인사가 국제법률기구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계속코자 한다.

한편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코자 한다.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 회담이 6년만에 재개된 바, 동 회담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한편,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해양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코자 한다.

II. 외교다변화 지속 추진 및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1. 전방위 정상외교 추진

정상외교는 현안 타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인 전방위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래 지난 4년간 22회에 걸쳐 38개국(중북 방문국 제외)과의 정상외교를 펼쳤다.

최근에는 정상외교의 의제가 과거의 정

치·안보 중심에서 경제·통상, 환경, 에너지·자원, 인권, 노동과 같은 사회적 이슈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의전적 성격이 약화되고 실무방문 형식이 선호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무방문의 이점을 살려 보다 실질적인 정상외교를 전개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금년에도 지역 안배와 전략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해외시장의 개척,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 전방위 정상외교를 활발히 펴 나갈 것이다.

2.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

한·미 동맹관계는 양국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양국은 2003년 5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역동적 관계로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공동 설정하였으며, 2006년 1월 개최된 장관급 전략대화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넘어 지역적·범세계적 이슈에 관하여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금년중 FTA 협정 체결과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한미관계를 명실 공히 ‘포괄적·역동적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대화, 경제분야에서의 FTA 체결, 그리고 인적·사회교류 부문에서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은 양국 관계가 현안 중심의 협의에서 벗

어나 제도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제반 동맹 현안에 있어 기 합의된 사항을 원만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즉, 정부는 작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의 인식에 기초하여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원칙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간 공동 계획이 금년 상반기중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 이전·재배치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재조정은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확고한 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3. 일본 및 중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긴요한 바, 일본 사회내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하여 역사공동연구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한센인 문제 등 과거사에 기인한 현안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국과는 2003년 7월 한·중 정상회담시 설정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

속 심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정부 고위 인사 상호 방문 등 정치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수교 15주년 기념 ‘한·중 교류의 해’ 행사, ‘Dynamic Korea’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우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간 각종 고위급 협의 및 외교·안보 분야 대화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시키고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2005년 11월 정상회담시 채택)를 이행하는 한편, 주 서안 총영사관을 개설하여 우리 기업의 서부 진출을 지원코자 한다. 한·중간 역사문제는 우리의 뿌리 및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되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측과 계속 협의하도록 한다.

4. 러시아·중앙아·CIS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강화

한·러 관계에 있어서는 2004년 9월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실현하고 2005년 11월 채택된 「한러 행동계획」(Action Plan)을 이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동시베리아 및 사할린 원유·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 기업의 원유·가스전 공동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인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2008년 4월), 한-러 합작 우주발사체 추진사업

(2007년 말) 등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및 CIS 거주 고려인(51만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주 사할린 출장소,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등의 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중앙아·CIS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및 점증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작년 10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된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행해 나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전략적 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방문으로 다져진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탐사 등 자원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한편,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차원의 대화채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작년 6월 정회원으로 가입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對중앙아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고, 「상하이 협력기구」(SCO)와의 협력은 향후 SCO의 정책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한다.

5. 아시아·대양주 국가들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최근 인도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서남아시아의 국제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對서남아시아 외교를 본격화하며,

2005년 이래 동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민간기관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IT 및 과학기술, 자원, 에너지, 농업분야 등에서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미국, 중국, 일본, EU에 이어 우리의 5번째 교역 파트너인 ASEAN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수출시장인 동시에 자원의 주요 공급지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4년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동 선언을 구체화시킨 「한-ASEAN 행동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한-ASEAN FTA가 조기에 실현될 경우, 한-ASEAN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SEAN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CT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한-ASEAN 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지역협력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ASEAN+3와 EAS가 가장 대표적이다. ASEAN+3는 1997년 ASEAN 정상회의에 한·중·일 정상이 동시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정례화되어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ASEAN+3 체제 하에서는 외환 스왑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출범한 EAS는 원래 ASEAN+3의 장기적 비전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재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도 회원국이 되어 ASEAN+3와는 전혀 다른 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ASEAN+3 및 EAS는 서로 중첩되지 않는

관계를 설정하여 역내 협력에 기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 구주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유럽내 동서냉전 상황의 종결을 의미하는 EU 확대 및 통합 심화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북아시아 구상의 선행모델이다. 2007년에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국익에 기초한 한-EU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갈릴레오」 프로젝트, 「핵융합실험로」(ITER) 등 EU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EU 신규가입국인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강화, EU 가입 후보국인 터키와의 한-터키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을 통해 EU통합 및 확대 심화를 활용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전개코자 한다.

특히,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 및 2007년 G-8 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독일과는 한-EU 차원의 실질협력 강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과는 이들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2004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개최되고 있는 「한-영 상호 방문의 해」행사의 성공을 통해 양 국민간 이해를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EU 중심국가의 하나인 프랑스와는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2004년 한-불 정

상간 합의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이러한 우호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간 현안인 외규장각도서 반환 문제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

7. 아중동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내실화

최근 고유가 추세로 경제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아중동 지역의 경제적·정치적 잠재력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활용코자 총리급 이상 정상외교 및 이를 보완하는 고위급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아중동지역과의 약 30개에 달하는 공동위·정책위를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코자 한다. 동시에 「아랍연맹」(Arab League), 「걸프협력이사회」(GCC), 「아프리카연합」(AU) 등 지역기구와 보다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작년에 출범한 「한-아프리카 협력포럼」과 올해 5차회의가 열리는 「한-중동 포럼」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작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시 천명한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를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對중동·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앙골라 대사관, 주다마스쿠스 총영사관, 주예멘 대사관 등 신설을 추진하고 아중동국가의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적극 추진코자 한다.

8. 중남미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확대

2007년초 다수 중남미 국가에서 신정부가 출범하는 것에 맞추어 정상 방한 등을

추진하여 우호협력 관계를 가일층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우리 공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외교망을 확충시키고자 한다.

한편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가속화 추세에 대비하여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정회원국 가입, 「한-MERCOSUR 정책협의회」 개최, 「한-SICA 대화협의체」 및 「한-CARICOM 대화협의체」 회의 개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내 역할 증대 등을 통하여 중남미 진출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Ⅲ.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통상 경쟁력 강화

1. 통상현안 관리 및 우리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작년에 수출 3,000억불을 달성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1998년 이래 지속되어 중국, 미국,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상현안을 관리해 나가되 통상마찰 발생시에는 WTO 분쟁해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적극 대처할 것이다.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의 통상·투자와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폴란드 보로츠와프시, 모로코 탕헤르시 등과 경합하고 있는 여수시가 「2012년 세계공인박람회」를 유치(12월 142

차 BIE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코자 한다.

2. FTA 전략적 추진

WTO의 DDA 협상이 5년간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 대상국들의 배타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지역주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전략적으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FTA 체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은 금년 6월 만료예정인 미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에 대한 미의회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거대경제권과 추진하는 최초의 FTA로서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파장이 지대한 만큼 시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등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내실있는 협상에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또 다른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본격적 양허협상단계에 돌입한 인도와의 FTA 협상에서는 우리 주력수출품목의 시장접근을 확보하려 하며, 금년초 출범 예정인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는 우리측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이른바 ‘친디아’(Chindia)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3. 다자무역협상 주도적 참여

교역규모가 GDP의 70%를 상회하고 수출이 3천억불 수준을 넘는 수출주도형 경

제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던 안정적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WTO의 DDA 협상에 적극 참여코자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전국가로서 최근 DDA 협상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기여함으로써 다자무역규범 수립과정에서 국제적 위상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코자 한다.

우리나라는 공세적인 공산품 분야와 수세적인 농업 분야를 동시에 갖고 있는 국가로서, 글로벌 차원의 관세 인하를 도모하는 한편, 농업분야에서는 농산품이 공산품과는 달리 비교역적 특성과 민감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해운, 유통 등 인프라서비스 자유화를 적극 추구하고, 우리시장 개방을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반덤핑, 무역원활화 등 우리기업의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통상규범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

4. 에너지 외교의 전략적 추진

최근 국제사회는 고유가, 산유국 정정불안, 중국·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로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소비국에 있어서는 에너지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높은 대중동 의존도(원유 82%, 천연가스 50%)를 낮추고 수급선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아중동 등과 자원 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온 바, 향후 이들 국가와의 에너지 자원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단순 지분 참여보다는 축적된 개발 경험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탐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원 개발의 자주권을 확보해 나가코자 한다.

5. 환경협력 외교 강화

작년 5월에 시작된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관한 협상에 있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여건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지구적인 지구온난화 대응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해양오염 등 환경문제 대처를 위하여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시아내 국가들과 체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

6. 개발지원 확대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천년개발목표」(MDGs)가 채택된 이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현재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2009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1%로 늘리고, 이후에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0년 국제사회의 원조선진국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목표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의 확대, 원조 관련 조직의 강화, 원조

평가시스템 도입 등 원조체계를 선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혁신적 개발 자원 마련을 통한 최빈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 국제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7년 하반기중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007년 3월 원조선진국, 수원국,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UN 사무총장 MDG 특별자문관 Jeffrey Sachs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등)가 참석하는 ODA 국제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7. 항공·우주분야 기반 강화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 허브 실현을 위해 1998년 미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난해에는 베트남, 태국,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항공자유화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일본, 러시아, 필리핀, EU 등과의 항공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자유화는 pre-FTA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 FTA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경우 소비자 편의 증대, 항공 산업의 구조개편 및 항공시장의 실질적 확대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2008년까지 소형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2010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정지궤도 실용위성을 독자 개발할 계획인 바, 이를 통해 세계 우주산업 시장 진출을 도모코자 한다.

IV. 재외국민·동포의 안전과 권익 증진

1. 재외국민보호체계 강화

재외동포의 수가 670만명에 이르고 연간 해외여행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관계로 해외발생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외교부는 신속대응팀 구성(2005.4월), 세계 최초 영사콜센터 설치(2005.4월), 휴대폰 국제로밍을 이용한 긴급상황 전파시스템 운영(2005.5월), 해외여행 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2004.12월), 방송(KBS 라디오, YTN, 아리랑 TV 등)을 통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등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구축해 온 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서는 현지인사 등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국민을 보호토록 하는 한편 공관내 영사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동시에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재외동포 권익 증진

재외동포들의 실질적인 권익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별 동포사회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한 지원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국, 러시아·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

를 실시함으로써 모국 방문·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국내에 주민등록되어있는 재외국민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머지않아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국적 허용은 해외인재 활용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병역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정서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간 균형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V. 국가 이미지 및 외교 정책에 대한 대내외 이해 제고

1. 문화 외교 활동 증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연성 국력(soft power)의 증진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존경과 권위에 기초한 연성국력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경제면에 있어서도 우리 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연성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 및 우리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지 맞춤형 문화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및 대외교류 활동을 지자체 자문대사 활동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UNESCO 세계유산위」위원회(2006~2009년 임기) 지위를 활용하여 UNESCO 및 기타 문화 관련 다자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고, 「2014년 동계올림픽」평창 유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대구 유치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인천 유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류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일부 국가에서의 부정적 반응에 적극 대응하고, 한류의 지속적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교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작년 9월에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1회 동아시아 영화제 및 공연제가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금년에도 유사한 행사를 개최코자 한다.

2. 외교통상정책 및 주요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외교·통상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고 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외교부 견학, 지방 중·고교 방문, 지방대학 강연 등 대국민 참여(outreach) 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키고 대국민 온라인 대화채널을 강화하고자 한다.

Ⅵ. 외교 경쟁력 강화

1. 인사 및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외교부는 2001년 정부부처 최초로 계급제 폐지와 직위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 외무인사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11월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영사직렬을 신설하고, 중견 및 고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고위직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7월 부처 최초로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2005년 7월에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보직 및 보수체계 구축을 위해 과장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계약제를 도입한 바, 2007년에도 이러한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 조직성장 잠재력 강화

외교역량평가제도 정착 및 외무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통해 외교인력의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특히 우리 외교인프라를 중견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97년 외환위기 직후 축소된 외교망의 복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무인력 보강과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상황에 적극 대처코자 한다.

그간 상당한 진척을 보여 온 e-Diplomacy, 외교통상정보 포털 및 통합보안관제체계 구축, 외교지식관리기반 조성 등 사업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외교경쟁력 향상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Ⅶ. 결 어

2007년 한 해에도 우리 외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FTA 등과 같이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경제·안보질서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올해도 외교보국의 사명감을 갖고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코자 한다.

이와 함께, 외교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에 바탕을 둘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외교’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들이 외교통상부를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되는 영사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를 국민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영사서비스 체제를 갖추코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형 선진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 인프라의 획기적인 강화가 시급한 바,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 